

제 5 장 「국민 정체성의 지정학」

Tran Tung Ngoc (진송옥)

1. 핵심 개념과 문제 설정

이 장의 출발점은 국가(state), 국민(nation), 국민국가(nation-state)를 구분하는 데 있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주민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행사하는 국제체계의 기본 정치단위이다. 반면 국민은 공유된 언어·역사·문화와 같은 표지를 통해 스스로를 하나의 집단으로 상상하는 공동체이다. 국민국가는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국민이 자연스럽게 일치한다는 관념을 전제하지만, 실제 국가들은 대체로 복수의 문화집단과 중첩된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일치는 경험적 사실이라기보다 정치적으로 생산되고 유지되는 이데올로기적 명제에 가깝다.

개념	핵심 의미
국가 state	영토·주권·통치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공간 단위
국민 nation	공유된 역사와 문화에 근거하여 하나의 공동체라고 믿는 집단
국민국가	국가의 경계와 국민의 경계가 일치해야 한다는 정치지리적 이상
국민주의	국민에게 국가와 영토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이데올로기
지정학 코드	국가가 위협·안보·이익·적을 규정하고 대외행동을 정당화하는 틀

2. 국민 정체성의 형성: ‘위에서 아래로’

국민주의는 국가 관료기구 자체에 대한 충성보다 국민 공동체의 안녕, 존속, 영토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감정을 조직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교육, 국기와 의례, 노래와 춤, 국민신화, 스포츠 행사와 기념행사 등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의 주민을 하나의 국민으로 사회화한다. 본문은 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이주민 사회의 다양성을 넘어 ‘미국인’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어낸 점은 통합의 성과이지만, 중국인 배척, 원주민 학살, 흑인 노예제와 인종차별, 아랍계 미국인에 대한 강압적 안보정책처럼 통합의 이면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해온 역사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국민 형성은 차이를 제거하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포함과 배제의 경계를 동시에 생산하는 공간정치이다. 누가 국민의 정상적 구성원인지, 어떤 역사와 기억이 공식적으로 가르쳐지는지, 어떤 집단이 주변화되는지를 묻는 것이 국민 정체성의 지정학을 분석하는 첫 단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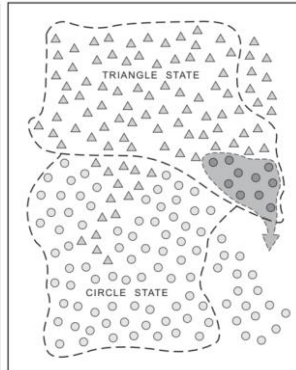
3. ‘아래에서 위로’의 국민주의와 민족청소

본문은 단일한 문화집단으로 구성된 ‘순수한’ 국민국가를 요구하는 폭력적 국민주의를 아래로부터의 극단적 형태로 설명한다. 다민족·다국민 국가를 허약하거나 비정상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면, 동화보다 추방과 제거가 선택될 수 있다. 이때 민족청소는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영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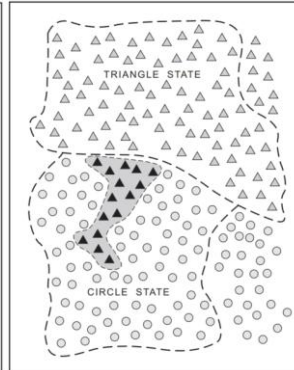
인구를 일치시키려는 체계적 과정으로 전개된다. 먼저 국경 안의 소수집단을 추방하고, 재산과 거주 기반을 파괴하며, 남성에 대한 살해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통해 집단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공격한다. 이어 국경 밖에 거주하는 동족을 자국 영토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경선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뒤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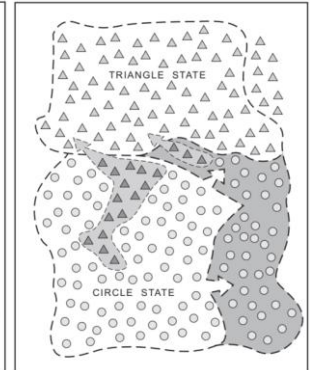
<그림 5.2> 민족청소 이전의 상황



<그림 5.3> 민족청소: 추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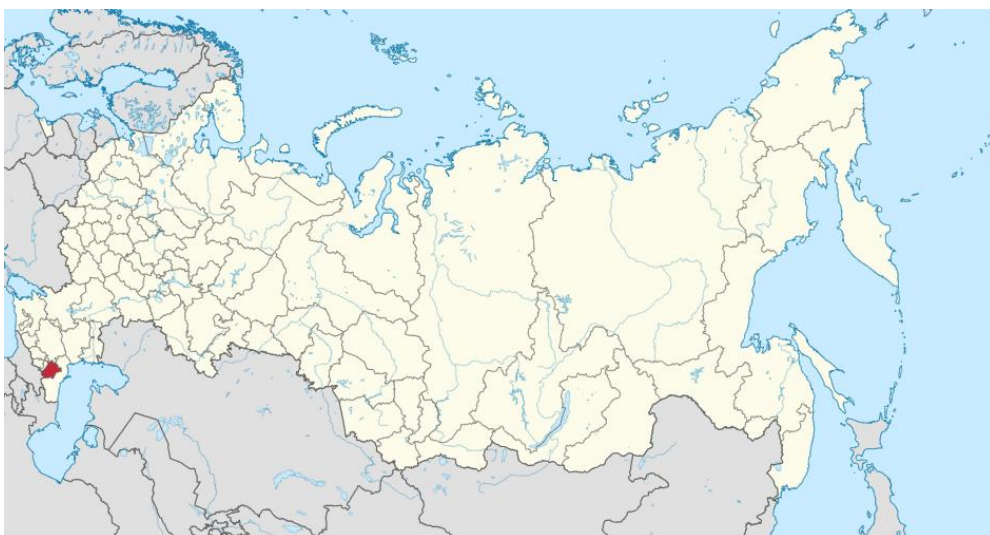
<그림 5.4> 민족청소 제거/말살



<그림 5.5> 민족청소: 확장

그림 5.2~5.5가 보여주는 핵심은 인구의 문화적 분포와 국가 경계의 불일치가 반드시 분쟁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정치행위자가 사회·경제적 위기의 책임을 소수집단에게 돌리고, 다원적 공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서사를 동원할 때 발생한다. 결국 민족청소는 ‘순수성’과 ‘전체성’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위해 사람의 이동, 신체, 재산, 재생산을 폭력적으로 재배치하는 영토공학이다.

4. 체첸니아 사례: 하나의 영토, 경쟁하는 두 지정학적 비전



체첸 분쟁은 동일한 공간이 상반된 국민주의적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준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체첸니아는 국가의 영토적 통합을 보전해야 하는 전략적 거점이며, 체첸인의 시각에서는 역사적 억압을 극복하고 독립적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할 고국이다. 석유와 철도, 카프카스의 전략적 위치 같은 물질적 조건은 분쟁의 배경이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을 설명할 수는

없다. 1944 년 강제이주와 언어 · 기억의 말살, 귀환 이후의 갈등, 소련 해체와 독립 선언은 체첸 국민주의가 공유된 고통과 상실의 기억 위에서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사례는 국가와 반군의 폭력이 민간인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드러낸다. 피난민은 고향에서 추방될 뿐 아니라 모스크바에서도 등록, 주거, 교육, 이동의 제약과 차별을 경험한다. 체첸에 남은 주민은 러시아 군과 체첸 반군 양쪽의 의심과 공격에 노출된다. 전쟁은 전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검문소, 임시수용소, 학교, 도시의 행정창구처럼 일상적 공간으로 확산된다.

위협을 재현은 대중의 동의를 조직한다. 러시아 정부는 체첸의 공격과 지도자 발언을 부각하여 영토 보전 전쟁을 정당화했고, 체첸의 테러는 러시아 사회의 보복 심리를 강화했다. 반면 군인어머니회는 징집병의 죽음과 군대 내부의 폭력을 공론화하며 국가의 전쟁 수행에 균열을 만들었다. 이 사례는 국민주의가 국가 대 민족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정부, 정당, 군인, 가족, 피난민, 언론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참여하는 다층적 공간정치임을 보여준다.

5. 젠더화된 국민주의와 지정학 코드의 군사화

국민은 앤더슨의 표현처럼 ‘상상된 공동체’이지만 본문은 이를 가부장적 ‘상상의 가족’으로 확장한다. 모국(motherland)은 양육, 재생산, 가정, 귀환의 이미지를 여성에게 부여하고, 조국(fatherland)과 국가의 방어는 통치, 군사, 공적 공간을 점유하는 남성의 역할로 배치한다. 여성은 국민의 미래세대를 낳고 사회화하는 존재, 전쟁터에 나간 남성을 기다리며 희생하는 존재로 재현되고, 남성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호자이자 영웅으로 구성된다.

9·11 이후 미국의 영웅 담론은 이러한 젠더화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남성 소방관과 경찰관의 용맹은 국민적 영웅주의로 강조된 반면, 여성 구조대원의 활동은 주변화되고 여성은 주로 남편을 잃은 유가족으로 호명되었다. 개인의 죽음과 가족의 슬픔은 국민적 비극으로 번역되어 군사행동과 안보정책을 정당화하는 자원이 된다. 이처럼 사적 감정과 가족의 이미지는 외교정책과 전쟁을 지지하는 공적 언어로 전환된다.

군국주의는 무력이 갈등 해결의 궁극적 수단이며, 적의 존재와 위계적 질서는 자연스럽고, 위기 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며 남성은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가정을 포함한다. 군사화는 이러한 가정이 제도와 일상에 스며드는 과정이다. ‘전투’가 남성성의 최종 시험으로 제시될수록 군대는 남성을 만드는 제도가 되고, 전투 경험을 가진 남성은 공적 영역의 권위를 획득한다. 따라서 젠더 역할, 국민주의, 지정학 코드는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한다.

6. 국민 신화, 역사지리적 이해와 지정학 비전

지정학 코드는 단순한 전략 계산이 아니라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와 지리의 언어를 통해 정당화된다. 본문은 세 가지 역사-지리적 이해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는 특정 민족문화 집단의 역사적 고국이라는 믿음이다. 둘째, 국가는 산맥·강·반도·섬과 같은 물리환경적으로 통일된 단위라는 믿음이다. 셋째, 현대 국가는 오랜 정치-영토적 실체의 계승자라는 믿음이다. 그리스가 키프로스를 고대 그리스 세계의 연속선상에 배치하거나, 스페인이 지브롤터를 자국의 물리적 일체성을 훼손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례는 영토 주장이 역사와 지리의 서사를 통해 ‘상식’이 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디즈킨크가 말한 지정학 비전은 자국과 타국의 관계를 안보와 불안, 이익과 불이익, 집단적 임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유된 세계상이다. 국민의 역사에는 영광과 수치, 고통과 자존심의 기억이 축적되어 있고, 국가는 이 ‘자존심과 고통의 지도’를 통해 실제 또는 구성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와 분리된 엘리트의 행위가 아니라, 학교교육, 언론, 기념, 가족, 군대, 일상적 감정이 결합하여 대중의 동의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7. 종합

이 장의 핵심은 국민 정체성이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실체가 아니라 영토, 경계, 기억, 젠더, 안보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공간적 관계라는 데 있다. 국민주의는 다양한 집단을 통합할 수 있지만, 동질성을 절대화할 경우 타자를 추방하고 국경을 폭력적으로 재편하는 논리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지정학을 이해하려면 국외의 전쟁과 외교뿐 아니라 국내의 교육, 재현, 가족관계, 이주, 군사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

발제문: 한반도에서 국민·민족 정체성은 어떻게 영토화되는가

1. 문제 제기: 하나의 민족과 두 개의 국가

이 장은 국민 정체성을 일정한 영토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린 고정적 속성이 아니라 국가제도, 정치담론, 교육, 지도, 역사기억, 군사제도와 일상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지정학적 구성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은 한반도의 사례를 분석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한반도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언어와 역사,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공간으로 상상된다. 그러나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제도, 역사서술, 국민교육과 안보담론을 형성해 왔다. 그 결과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념과 두 국가의 국민 정체성이 중첩되면서도 충돌하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산업화,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경험이 국민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항일혁명, 사회주의 건설, 자주와 지도자 중심의 정치서사가 국가 정체성의 중심을 이루었다. 남북한 주민은 동일한 민족에 속한다고 인식되면서도 각기 다른 국가의 제도와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국민으로 사회화되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한민족은 어느 영토에 속하는가”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제도와 담론이 특정한 주민집단과 영토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가”, “남북한의 국민 정체성은 상대방을 어떻게 적, 동포, 경쟁자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재현하면서 형성되어 왔는가”를 물어야 한다. 한반도는 본래부터 하나이거나 둘로 나뉜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통일과 분단, 민족과 국가, 동질성과 차이, 평화와 안보를 둘러싼 경쟁적 서사를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지정학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 분단 경계와 영토의 공간정치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한 영토의 분할이 아니다. 분단은 주민의 이동, 역사적 시간, 정치적 기억, 가족관계, 언어와 적대의 감정을 함께 분할해 왔다. 특히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이러한 분단질서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군사분계선은 지도 위에 표시된 하나의 선이지만, 실제로는 철책, 지뢰지대, 군사기지, 검문소, 민간인통제구역, 접경마을과 전망대 등 넓은 공간적 체계로 존재한다. 이 경계는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과 개발을 통제하며, 특정 지역을 위험지대와 안보공간으로 분류한다. 접경지역 주민에게 분단은 추상적인 국제정치가 아니라 농업, 주거, 이동, 개발과 생계에 직접 개입하는 일상적 조건이다. 동시에 비무장지대는 상반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전쟁과 군사적 긴장의 상징이면서도 생태보전, 평화, 관광과 통일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현된다. 동일한 장소가 군사적 방어선, 민족분단의 상처, 생태자산, 관광상품 또는 평화지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의미는 지형이나 군사시설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기관, 지방정부, 군대, 언론, 관광산업,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어떤 담론과 실천을 전개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경계는 남북을 나누는 선인 동시에 사람의 이동, 정체성, 기억과 일상을 조직하는 권력의 공간이다.

3. 역사기억, 안보담론과 젠더화된 국민주의

한반도의 국민 정체성은 지도, 역사교육, 기념의례와 안보담론을 통해 강하게 영토화된다. 학교에서 제시되는 한반도 지도는 남북한의 현실적 경계가 존재함에도 한반도를 하나의 역사적·문화적 단위로 상상하게 한다. 이러한 지도는 민족공동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분단을 비정상적이고 잠정적인 상태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동일한 한반도 지도도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통일의 당위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 국가의 영토적 정통성을 주장하거나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는 안보교육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식민지배, 해방,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서술 역시 남북한의 국가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누구를 침략자와 희생자로 규정하는가, 어떤 인물을 영웅으로 기념하는가, 어떤 사건을 국가의 출발점으로 설정하는가는 현재의 정치체제와 영토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전쟁은 국가적 희생과 영웅주의의 서사뿐 아니라 민간인 희생, 피난, 이산가족, 월남과 월북, 고향 상실의 기억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쟁기억은 하나의 통일된 국민서사로 환원될 수 없으며 지역, 세대와 가족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이러한 안보와 전쟁의 담론은 젠더화되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와 징병제 속에서 남성은 군복무를 통해 국가를 방어하는 국민으로 인정받고, 군대 경험은 성인 남성의 시민성과 책임감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면 여성은 군인을 기다리는 가족, 전쟁의 피해자, 보호받아야 할 국민 또는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는 어머니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성 군인, 군인 가족, 이산가족 여성, 탈북여성, 접경지역 주민과 평화운동가의 경험은 기존의 ‘남성 수호자-여성 보호대상’이라는 구도를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젠더 분석은 여성의 군대와 공적 영역 진출 여부만이 아니라 왜 국가안보와 군사력이 남성성의 증명으로 간주되는지를 함께 질문해야 한다.

4. 동질성 이후의 한반도 정체성

한반도의 국민 정체성을 분석할 때 ‘단일한 한민족’이라는 관념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주장은 남북한의 역사적·문화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한반도 내부의 지역, 계급, 젠더, 세대, 종교와 정치적 경험의 차이를 지울 수 있다. 특히 남한에서는 국제이주, 결혼이주, 이주노동, 다문화가족과 외국 출신 주민의 증가로 인해 국민과 민족의 경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한민족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이탈주민과 재외동포는 민족적으로 가까운 존재로 간주되면서도 실제 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제도적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법적 국민, 문화적 민족과 정치적 시민공동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러시아, 미국 등지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민족 정체성이 한반도라는 하나의 영토에만 고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래의 한반도 정체성을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영토가 다시 일치하는 문제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통일 역시 단순히 분리된 영토를 다시 결합하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제도, 생활세계, 기억,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장기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을 남북관계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의 전략은 한반도의 안보담론과 영토적 의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의 전략만을 강조하면 남북한 주민, 접경지역 주민, 이산가족, 탈북민과 다양한 사회집단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

결국 한반도 정체성의 핵심 문제는 ‘순수한 민족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적 경험, 국적, 문화, 기억과 정치적 소속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5. 분석틀과 토론 과제

한반도의 국민·민족 정체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분석 층위	핵심 질문	주요 관찰 대상
물질적 공간	어떤 경계와 이동이 통제되는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구역, 군사기지, 접경지역, 탈북 경로
재현과 담론	한반도, 영토와 상대방은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교과서, 지도, 언론, 영화, 정치연설, 전쟁기념시설, 통일·안보교육
일상과 신체	분단과 국민주의는 어떻게 수행되고 체화되는가?	징병과 군복무, 가족 역할, 이산가족, 탈북민 정착, 이주민, 차별과 저항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

1. ‘한민족’이라는 관념은 남북한의 적대적 국가 정체성을 완화하는가, 아니면 각 국가의 영토적 정통성을 강화하는가?
2. 한반도를 하나의 역사적 · 문화적 공간으로 그린 지도는 분단을 극복하는 상상력을 제공하는가, 아니면 한반도 내부의 차이를 지우는가?
3. 한국전쟁과 분단의 기억은 국가의 공식서사와 개인 · 가족의 기억 사이에서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가?
4. 북한이탈주민은 동일한 민족의 구성원, 대한민국 국민, 이주민 또는 안보의 대상으로 각각 어떻게 재현되는가?
5. 다문화사회에서 한국의 국민 정체성은 민족적 동질성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가?